

2017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도원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2017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I

감사실시 개요

- ❖ 기존 감사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노력과 함께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 취약분야를 집중 수검대상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올바른 회계질서 정립에 일조하고 사전·예방적 감사 지향을 통한 “원칙”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도모

☐ 감사 대상 및 기간 등

- 기 간 : 2017. 5. 15 ~ 2017. 5. 19
- 대 상 : 도원동 주민센터
- 감사범위 : 2015. 9월 ~ 2017. 4월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종합감사)
- 감 사 반 : 감사팀장 外 4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각종 회계업무 처리 및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 여부
- 민원 및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적정운영에 관련된 법령(지침) 준수 여부
 -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에 중점 등

1. 총 평

- 금번, 도원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년 주기가 도래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특히,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시정(是正) 감사 및 행정의 낭비요인 부패행위에 대하여 사전차단 및 예방에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투입,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감사 목적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예산·회계, 민원행정, 일반행정, 복지행정 등의 각 분야에서 16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 각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담당직원 업무연찬 실시가 필요하고 “시정”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
- 또한,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 책임자 및 부서장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

2. 처분내역 총괄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부과	지급	
도 원 동	16	6	10	-	90/1	-	90/1	-	-	-

3. 지 적 사 항

지적사항 목록

연 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원)
1	예산회계	약식지급명령 처리 규정 위반	도 원 동		주의	
2	"	통장 수당 지연 지급	도 원 동		주의	
3	"	부가가치세 미신고	도 원 동		주의	
4	"	출장여비 부당 지출	도 원 동		시정	회수 (90,000)
5	"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지연	도 원 동		주의	

연 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원)
6	민원행정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도 원 동		주의	
7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소홀	도 원 동		시정	
8	"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미파기)	도 원 동		시정	
9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증 소홀	도 원 동		주의	
10	"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도 원 동		주의	
11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도 원 동		주의	
12	일반행정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자 관리 소홀	도 원 동		시정	
13	"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도 원 동		시정	
14	"	통·반장 위·해촉 통지 미실시	도 원 동		주의	
15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운영 부적정	도 원 동		주의	
16	복지행정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소홀	도 원 동		시정	

주요 지적사항

가 예산·회계 분야

사례 1 약식지급명령 처리 규정 위반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7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에도 2014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약식지급명령” 서식에 직인·사인을 날인하지 않았고, 담당자 날인도 누락되었음에도 금고에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해당 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2 통장 수당 지연 지급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실비변상) 제1항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래표와 같이 통장들에게 2017년 3월에는 매월 지급하는 통장수당을 4일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통장 수당 지연 지급 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건	2,800,000원	-	-
2017-03-24	2,800,000원	2017년 3월 통장수당 지급	김**통장외 13명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통장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담당자에 대해 관련된 법령을 정확히 숙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
(⇒ 행정상 주의)

사례 3 부가가치세 미신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140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제1항에 의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있음.
- 또한 제2항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홈텍스사이트에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의 신고를 통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회계업무 담당자는 관련된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4 출장여비 부담 지출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출장여비 부담 지출현황”에서와 같이 출장명령 시간에 전자결재 상의 전자업무를 수행, 출장여비를 부담하게 지급(9건, 90,000원)한 의혹이 있음.

『표』 출장여비 부담 지출현황

(단위 : 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명령 시간		출장명령 시간 내 결재시간		지급 출장 여비
				출장일	출장시간	결재시간	결재문서명	
총 9건, 90,000원 지출								
1	도원동 주민센터	** 6	김**	2016.02.02	14:00~15:00	14:44~14:58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알림(기술개발제품) 외 12건	10,000
2	도원동 주민센터	** 6	김**	2016.02.25	14:00~15:00	14:22~14:26	2016년 2월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경사항 확인 결과 제출 외 9건	10,000
3	도원동 주민센터	** 7	민**	2016.03.07	11:00~12:00	11:24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설치대상지(장소) 선정 제출 요청	10,000
4	도원동 주민센터	** 7	민**	2016.03.09	11:00~12:00	11:46	지정기탁신청서(현물) 및 지원대상자 명단 제출	10,000
5	도원동 주민센터	** 7	홍**	2016.04.01	13:00~14:00	13:22~13:36	3월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외 1건	10,000
6	도원동 주민센터	** 6	김**	2016.05.13	14:00~15:00	14:4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신청	10,000
7	도원동 주민센터	** 7	민**	2016.05.24	16:30~17:30	16:35~17:06	의사상자 제도 안내 등 협조 요청 외 5건	10,000
8	도원동 주민센터	** 7	민**	2016.10.17	16:30~17:30	16:47	장애인자동차표지 점검결과 제출	10,000
9	도원동 주민센터	** 9	김**	2017.02.03	13:00~14:00	13:45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2017. 1. 20일자)	10,000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90,000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

(⇒ 행정상 시정 / 재정상 회수)

사례 5 수입증지 수납금 납입 지연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1항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수입증지 수입금 지연 현황”에서와 같이 전자증지 수입금을 1일 지체하여 구 금고에 납입한 사실이 있음.

『표』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판 매		납 입	지연일 [일]
	일 자	금 액 [원]	일 자	
1	2015. 2. 17	6,400	2015. 2. 24	2
2	2016. 2. 5	5,000	2016. 2. 11	1
3	2016. 9. 30	65,800	2016. 10. 6	1
4	2016. 12. 18	83,800	2016. 12. 26	3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관련내용을 직원들로 하여금 숙지, 수입증지 수입금이 관련조례 지정일(익일) 안에 납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행정상 주의)

나

민원행정 분야

사례 6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

- 「2013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자치부) P31,
 - 라. 번호부여대장 관리
 - (3) 번호부여대장은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 (5) 번호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주민등록번호 부여 현황”에서와 같이 총 39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있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각 페이지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고, 성별 또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주민등록번호 부여 현황

기 간	부여 회수	합 계
2015. 9월 ~ 12월	8회	39회
2016. 1월 ~ 12월	27회	
2017. 1월 ~ 4월	4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과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기재(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업무에 철저
(⇒ 행정상 주의)

사례 7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행정부, 2013 주민등록 사무편람』 p130 “주민등록증 관리의 미발급자 정리”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경신미발급자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명부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미정리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기재·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별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미발급자 (1명)에 대하여 관련공부(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명부)에 미발급 사유를 기재·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미발급사유 예시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 ② 생년월일 착오 ③ 등록기준지미확인
- ④ 해외여행자 ⑤ 범법수감자 ⑥ 무단전출자 ⑦ 입원환자 ⑧ 지연자

【별첨 1】

(2017. 5월 현재)

주민등록증미발급자명부				
				출력일자 : 2017-05-15
				페이지 : 1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성명 미발급사유
1	오 [] ([])	9904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26번길 33-8 (13/5), 1 []	방 []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명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에서 확인 후 본인 통보 및 관련 공부상 “미발급사유”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송부 (⇒ 행정상 시정)

사례 8 습득주민등록증 처리업무 소홀 (미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별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호정 (94.11.17)에 대한 습득주민등록증을 2015. 9. 16일 습득 접수한 후, 2015. 9. 18일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수령해 가지 않은 해당 습득주민등록증을 해당 법령에 따라 파기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별첨 2】

습 득 주 민 등 록 증 처 리 대 장

행정기관 : 도원동

출력일자 : 2017-05-16

페이지 : 1

일련 번호	접수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습득기관	수령일자	회수일자	관외우송일자	결 재	
					수 령 자	회수사유	비 고	담당자	담당.주무
1	2015-09-16	장 [] 9411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10번길 50-2 (11/3), []	도원동주민센터	0000-00-00	- -	- -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장기보관, 미파기 습득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파기절차를 이행

(⇒ 행정상 시정)

사례 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증 소홀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 재발급)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에서와 같이 “전자증지는 그 인영(人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도원동에서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재발급 신청된 훼손된 주민등록증이 2006. 11. 1 이전 발급된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으로 수수료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증지 (250원)가 발행된 사실이 있음.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처리 소홀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일	위법·부당 사항
김**	1947.10.**	훼손	2015.12.23	- 2006. 11. 1 이전 발급된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으로 수수료 면제에 해당함에도 “250원” 전자증지 발행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 추진 시, 관련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
(⇒ 행정상 주의)

사례 10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동장은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와 같이 총 12건에 대하여 전입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및 통장 확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 전입자에 대한 전입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전입신고 확인서 관리 소홀 현황

번호	세대주명	신고일	제출일 (확인일)	전입최소 확인일(30일) 초과	거주여부 미확인	통 장 미확인	담당공무원 미확인
1	박**	2016.12.22	-	-	○	○	×
2	김**	2016.12.22	-	-	○	○	×

번호	세대주명	신고일	제출일 (확인일)	전입최소 확인일(30일) 초과	거주여부 미확인	통 장 미확인	담당공무원 미확인
3	이**	2016.12.22	-	-	○	○	×
4	백**	2016.12.26	-	-	○	○	×
5	박**	2016.12.26	-	-	○	○	×
6	홍**	2016.12.26	-	-	○	○	×
7	조**	2016.12.26	-	-	○	○	×
8	한**	2016.12.27	-	-	○	○	×
9	김**	2016.12.28	-	-	○	○	×
10	이**	2016.12.30	-	-	○	○	×
11	홍**	2017.01.10	-	-	○	×	×
12	황**	2017.04.04	-	-	○	×	×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전입신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11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4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발급 신청자(본인) 이정화(1971.03.03) 외 1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동 명	연 도	인감증명서 수령 확인 부적정		
		합 계	본인 미확인 (서명 또는 무인)	대리인 미확인 (무인)
도원동	2015 (12. 14)	2	1	-
	2017 (02.16)		1	-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인감증명 발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다 일반행정 분야

사례 12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대상자 관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에 근거한 민방위 교육지침 제1항 제1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민방위 자체교육을 서면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 7.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가 된 김용아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현재까지 자체교육대상자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김용아에 대하여 즉시,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로 편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

(⇒ 행정상 시정)

사례 13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규칙」 제21조(기록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부터 13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대장의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용차량을 정비한 내역을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시스템에 정비내역 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차량정비 세부내역 현황

(단위 : 원)

연 번	정 비 일	정비금액	정 비 내 역	비 고
1	2016-02-25	53,000	공용차량 정기검사	
2	2017-02-08	55,000	공용차량 정기검사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차량이력카드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차량수리내역을 즉시 차량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여 주시고,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차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 행정상 시정)

사례 14 통·반장 위·해촉 통지 미실시

-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통·반장의 위촉 등) 규정에 의하면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통장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위촉 및 해촉 해제)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며 통·반장을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반장 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장 해촉자 1명과 통장 위촉자 1명에 대하여 본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통·반장 위·해촉 시 통지 미실시 현황

번 호	통·반	성 명	위촉일	해촉일
1	*통 *반	유**	-	2016.12.12
2	**통	손**	2016.2.19	-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향후, 통·반장 위촉 또는 해촉 시에는 해당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15 주민자치 센터 및 위원회 관리·운영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에서와 같이 2015년 및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7항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 동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도원동에서는 201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2017. 4월말 현재)

(단위 : 건)

연 도	연간 운영계획 수립 여부		자치센터 사용료 등 수입·지출내역 공고 여부				회의록 작성 여부	
	수립 여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 여부	상 반 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하 반 기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회의개최 건수	회의록 미작성 건수
2015	×	×	-	-	○	○	4	×
2016	×	×	○	○	○	○	14	×
2017	○	○	-	-	-	-	4	×

『표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 현황

연 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개 여부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	수시 위촉 시
2015	-	○ (2015. 9. 9. - 2명 충원) (2015. 10. 14. - 3명 충원) (2015. 11. 11. - 1명 충원)
2016	×	-
2017	○	○ (2017. 1. 10. - 23명 신규 위촉)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 행정상 주의)

사례 16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등 회수 소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의하면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
-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음.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건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송부하거나 과태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미회수 현황

번호	대 상 자		변동일	변동사유
	성 명	생년월일		
1	양**	1949.**.**	2016.07.12	사망
2	최**	1930.**.**	2011.04.07	사망
3	원**	1944.**.**	2013.07.11	사망
4	노**	1926.**.**	2013.04.04	사망

번호	대 상 자		변동일	변동사유
	성 명	생년월일		
5	신**	1965.**.**	2011.11.03	사망
6	나**	1943.**.**	2013.01.17	사망
7	서**	1941.**.**	2013.12.29	사망
8	홍**	1955.**.**	2014.07.14	사망
9	최**	1952.**.**	2014.03.31	사망
10	이**	1945.**.**	2015.10.31	사망
11	김**	1957.**.**	2014.01.06	사망
12	안**	1937.**.**	2015.08.19	사망

▣ 도원동 주민센터에서는

- ☞ 미회수된 관련 등록증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
(⇒ 행정상 시정)

IV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해당기관(부서) 통보

- 시정·회수 등 :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